

[2016-10]

외주화
금지 입법 쟁취

외주화 금지 생명안전업무 정규직 고용

2016년 10월 / www.nodong.org / 02-2670-9115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9살 청년 노동자의 죽음



2016 5월 구의역 승강장 안전문을 수리하던 19살 청년노동자가 달리던 열차에 숨졌습니다. 가방에는 뜯지 못한 컵라면과 국물이라도 떠먹으려 했던 숟가락이 공구와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으로 무분별하게 외주화 된 승강장 안전문 정비. 순간 지하철 기관사에게 알려려면 9단계를 거쳐야 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청년 노동자를 죽였습니다. 2013년 성수역, 2015년 강남역에 이어 3번째 죽음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추모와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서울시는 외주용역 7개 업무를 직접 고용으로 전환했지만, 서울시 지하철에도 소방, 승강기, 청소등 여전히 외주업무가 남아있고, 광주, 부산 등 전국의 지하철은 승강장안전문등 외주 하청이 넘쳐납니다.

철도.지하철.. 제2,제3의 구의역 참사 넘쳐나



9 13일 지진으로 인한 지연 운행 연락을 못 받은 -김천 KTX. 선로보수 작업 하청 노동자가 더 큰 사고를 막으려 선로 위 손수레를 치우다가 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죽음도 처음이 아닙니다. 2011년 심야 선로보수 하청 노동자 5명의 사망을 비롯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의 최근 5년 중대 재해의 76%는 하청 노동자. 코레일은 외주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했고, 94.5%가 비정규직인 코레일 테크를 비롯, 5개 회사에는 비정규직이 넘쳐 납니다. 코레일 테크는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29명의 산재가 모두 비정규직입니다. 1천명 가까이 탑승하는 KTX에 안전담당 승무원 1명. 승무원 대부분이 외주하청이고, 불법 파견에 걸린다며 소방, 경비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여승무원은 안전교육도 없어졌습니다.

2014 8명 사망 현대중공업. 2016년 10명 사망. 6명이 하청



2014 8명의 하청노동자 사망이 이어졌던 현대중공업에서 아직 10월인 올해 10명의 산재사망이 이어졌고, 이중 6명이 하청 노동자입니다. 지난 5년간 현대중공업의 산재사망 중 74%에 달합니다. 현대중공업뿐 아니라 조선업의 외주화 확대는 하청 노동자의 사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조선업 3사(현대, 대우, 삼성)에서 발생한 37명의 산재사망 중 하청 노동자는 29명으로 78%에 달합니다. 조선업의 위험의 외주화 확대가 하청 노동자의 사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전 5개 공기업 사망사고 21명 100% 하청 노동자

5년간 발전공기업 5개사(남동, 남부, 동서, 서부, 중부발전)에서 산재사고 중 96.6%는 하청 노동자였고, 사망 노동자 21명은 전원 하청노동자였습니다. 특히, 특히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남부발전의 경우에는 사고 피해자 전원이 하청 노동자 일뿐 아니라, 이중 90%는 재하도급에서 발생했습니다.

한전 하청 노동자 산재 원청의 39배

원청 정규직 1년에 73만원 안전장구. 하청은 공사1건당 1만7천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보다 영업이익률이 높아 2016년 14조 3천억의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만 9조 4천억이 전망되는 한전. 그러나, 위험한 업무는 하청 노동자의 몫입니다. 한전의 하청노동자 산재발생은 원청 정규직의 39배로, 지난해만 87명의 하청 노동자가 사망을 포함하여 지난 5년간 총 710명이 한전 협력사에서 일하다 사망했습니다. 22,900V 전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활선공법을 비롯해서 전기원 노동자의 추락, 감전, 각종 직업성 암이 심각합니다. 동일한 작업을 하는 원청 정규직은 1인당 연간 73만원 상당의 안전장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전이 작성한 배전 예산서에는 하청 노동자 평균 3-4명이 팀 작업을 하는 1건공사당 306만원의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책정된 안전관리비는 1만7천여원입니다.

, 화학사고, 메르스, 지진에 원전까지 시민안전도 위협하는 위협의 외주화



38명이 사망한 메르스 사태 감염확산의 원인 병원의 외주화

응급차 기사, 간병인, 경비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가 30%를 넘나드는 병원의 외주화. 비정규직 노동자는 감염정보도 보호구 지급도 차별 받았고, 무분별한 병원의 외주화는 메르스 감염 확산의 원인이었습니다.

■ 누출사고 재난지역 선포, 화학사고로 죽어나가는 하청 노동자

2012년 구미 불산 누출 사고로 5명의 노동자가 죽고, 주민피해도 이어져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진 현대제철 아르곤 가스 누출, 화성 삼성 불산 누출, 대림 폭발사고, 울산 한화 케미칼 폭발사고, 고려아연 황산 누출, 한국석유공사 폭발 사고까지 화학물질 폭발 누출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울산, 여수 등 수 십년 된 노후 산단에서 하청 노동자는 죽고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대책으로 세워진 6개 화학방재센터는 예방은커녕 대피훈련만 하고 있습니다.

■ 지진으로 불안한 원전. 방사선 관리, 정비, 영수처리 모두 하청 노동자

원전 사고 사망 100% 하청 노동자. 방사선 피폭은 정규직의 10배. 지진경보도 누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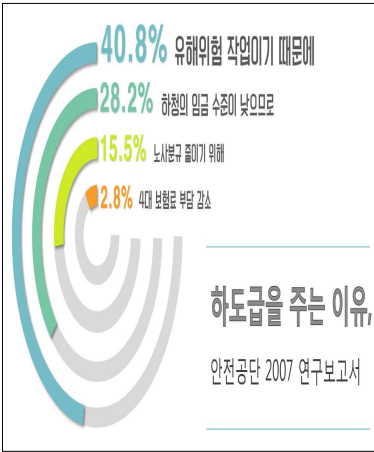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 확인된 한국에서 원전에 대한 불안이 지속됩니다. 그러나, 원전의 방사선 관리, 영수처리, 정비등 운영인력의 37%가 하청 노동자입니다. 최근 5년간 원전사고 81건 중 71건이 하청 노동자 사고, 사망사고 6명은 모두 하청 노동자입니다. 하청 노동자의 방사선 피폭은 일반인의 14배, 정규직의 10배에 달합니다, 그러나. 지난 7월 울산에서 진도 5.0 규모의 지진이 났을 때도, 9월12일 경주 지진이 났을 때도 하청 비정규 노동자는 지진경보 알림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 메탄올 중독사고 7명. 파견 노동자 실명위기

올해 초 인천, 부천에서 발생한 메탄올 중독사고. 삼성, LG 하청에서 불법파견고용으로 일하던 20대 노동자들이 실명위기에 처손상까지.. 그러나, 노동부의 임시건강진단에서 누락된 파견노동자 2명의 메탄올 중독이 다시 밝혀졌습니다. 파견, 용역, 하청의 이름으로 확대되는 위협의 외주화는 청년 노동자의 미래를 송두리째 날려버렸습니다.

외주화로 예방책임도, 사고 처벌도 빠져나가고 산재보험료 할인만 수백억 받는 대기업 최근 3년 1조3,796억 감면



상호주주제안기업집단 상위 30개 기업
2015년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산재보험료 할인액

30개 기업	사업장 소수	할인액(백만원)
삼성	84	-100,999
현대자동차	161	-78,534
한국전력공사	75	-13,740
한국투자신탁공사	22	-2,067
에스케이	117	-37,977
엘지	147	-37,917
롯데	124	-26,541
포스코	72	-26,252
지엠	76	-23,194
한국도로공사	75	-1,035
한화	95	-16,936
현대중공업	31	-22,810
농림	66	-7,773
한국가스공사	27	-1,223
한신	54	-7,039
두산	37	-14,126
케이티	36	-13,788
신세계	29	-10,243
씨제이	115	-8,969
에스케이지공사	3	-276
빙빙	13	-1,858
엘엑스	63	-2,632
한국수자원공사	62	-929
대우해운조선	13	-9,477
대림	23	-19,346
한국철도공사	17	-5,715
한국석유공사	11	-278
글로벌이노텍	29	-3,939
현대백화점	30	-1,921
현대	15	-3,583
합계	1,722	-498,117

자료 : 고용노동부

2015 30개 기업 사망 95% 하청 노동자 30대 기업 산재보험 할인 4천981억 삼성전자 1천9억. 현대중공업도 228억 감면

외주화를 선도하는 재벌 대기업.

중대재해 사망자중 하청 노동자 비율이 40%로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주요 30개 기업의 하청 노동자 사망 비율은 95%에 달합니다. 위험 업무 외주화로 대기업이 받는 산재보험료 할인은 2015년에만 4천981억. 0.7%에 불과한 대기업이 전체 산재보험료 할인액의 34%를 감면받았습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도급을 제한하는 중국 건설업도 직접 시공 비율을 강제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2014년 안전생산법을 개정해서 안전한 생산조건이나 상응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하청을 주거나 임대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하도급이 숙명인 것처럼 알고 있는 건설업도 원청이 하도급을 주지 않고 직접 고용하는 <직접 시공제>가 세계 각국에서 시행중입니다. 미국은 직접 시공의 최소 비율이 30% 이상이 24개주, 40% 이상이 10개주이고, 50% 이상인 경우도 16개 주입니다. 영국의 도로국은 계약금액의 60% 이상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고, 프랑스의 품질보증기관은 원청의 직접 시공 비율이 70% 이상 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독일도 연방정부공사는 최소한 30% 이상은 직접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내법에서도 소방시설, 전기, 정보통신, 소프트 웨어 산업, 승강기 유지관리등 10여개가 넘는 분야에서 안전, 노동조건, 공공성등을 이유로 도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생명안전업무 직접 고용은 국내외의 시대적 흐름입니다.

**19 국회때 폐기된 법안 구의역,남양주 사고로 다시 입법발의
위험의 외주화 금지는 하청 노동자뿐 아니라
사업장 전체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시민안전을 지키는 길입니다.
위험업무 외주화 금지 입법!!! 민주노총이 나섭시다 !!!**